

중국의 제20기 3중전회 주요 내용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정지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장 (jhjung@kiep.go.kr, Tel: 044-414-1280)

문지영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박민숙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박진희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Tel: 044-414-1285)

이효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차 례

1. 제20기 3중전회 개요
2. 「결정」의 주요 내용
3. 주요 경제정책 방향 전망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4년 7월 15~18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개최됨.
 - 시진핑 3기의 중장기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 심의·통과됨.
 - 「결정」은 개혁목표 및 경제·정치·사회 등 분야별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구성됨.
- ▶ 중국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견지하면서 2029년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당의 리더십 강화를 강조함.
 - 5년 후이자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이번 「결정」에 명시된 개혁과제를 완성하겠다고 제시함에 따라 개혁의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임.
- ▶ 경제 관련 개혁과제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고품질 발전 촉진, 전면적 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거시경제 거버넌스 개선, 도농 융합발전, 개방, 민생, 문화, 환경, 국가안보 등이 포함됨.
 - 시장기능 강화 및 정부의 관리 역할을 중시하고 특히 국유 자산·기업의 핵심기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전략산업 중심으로, △국가자원을 동원하여 발전시키면서 공급망 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강화할 방침임.
 - 교육·과학기술·인재 시스템의 통합 혁신 추진,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 제고, 중앙-지방 간 자원배분 조정, 금융의 실물 지원 및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제도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FDI)에 대한 개방범위 확대와 권익보호를 강화하면서 해외 물류 인프라 건설,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등을 촉진할 계획임.
 - 임대·구매 주택 병존의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이 민생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임.
 - 자국민 및 자국기업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차별, 외국의 제재·간섭·확대관할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임.
- ▶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블록화 및 성장동력 소진 등에 직면한 중국은 당의 경제 관리 강화, 국유 자본·기업의 역할 증대, 새로운 동력 발굴에 대한 국가자원 집중 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 부동산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를 '성장세 회복'보다 중시함.
- ▶ 경제 분야에 대한 당·정부의 통제·관리 심화,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위한 국가자원 총동원 등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새로운 협력 분야 및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첨단·미래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과 한중 경쟁 심화, 당·정부 통제로 인한 중국의 비시장적 요소 증대, 중국발 공급과잉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중 간 공급망 협력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양국의 병목 분야, 실버경제 및 신소비 관련 협력 확대 모색이 요구됨.

1. 제20기 3중전회 개요

■ 2024년 7월 15~18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개최됨.

- 3중전회(三中全會)는 현 지도부(시진핑 3기)가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여 당과 국민에게 제시하는 회의로, 향후 5~10년간 중국의 국가전략 방향 및 정책기조를 파악할 수 있음.
 -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며, 여기서 선출된 중앙위원들이 1중전회(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당의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 및 총서기를 선출함(당 인선).
 - 2중전회에서는 국가 및 정부기관 각료 등을 인선하며, 3중전회는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등, 보통 5년간 7중전회까지 개최됨.
- 통상적으로 3중전회는 당대회가 개최된 이듬해 10~11월에 개최되어 왔으나, 이번 제20기 3중전회는 특별한 이유나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 없이 20차 당대회 이듬해인 2023년에 개최되지 않았음.
 - 이번 3중전회를 7월에 개최한다는 계획도 2024년 4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확정됨.

■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 이번 3중전회에 출석한 중앙위원 199명 및 중앙후보위원 165명 등은 복잡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을 이루어내고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여기서 '전면적 개혁 심화'는 시진핑 1~2기의 발전전략이며, '중국식 현대화'는 시진핑 3기의 목표임.

■ 또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반영된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¹⁾을 심의·통과시킴.

- 중국 공산당은 10년 주기의 최고지도부 교체시기에 개최되는 3중전회에서 새로운 지도부의 집권기간 10년의 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결정」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총서기 교체 없이 시진핑 3기 체제의 「결정」이 발표됨.
 - 2013년 18기 3중전회, 2003년 16기 3중전회, 1993년 14기 3중전회 등 '짝수'기의 3중전회에서 새로운 지도부의 장기 정책 방향이 발표됨(표 1 참고).
-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결정」 초안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정세와 과제에 직면한 중국이 개혁조치를 더욱 더(진일보)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각 부문의 제도·시스템 개선 및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의 제도적 장점을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함.
- 3중전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중국이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목표, 개혁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음.

1) 「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2024. 7. 21.).

■ 이에 본고에서는 제20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결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진핑 3기 이후 중국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표 1. 과거 3중전회의 주요 정책 결정

회의	발표 문건	주요 개혁개방정책
11기 3중전회 (1978. 12.)	농업발전에 관한 결정(초안)	- 사상해방, 실사구시의 개혁개방정책 표방, 농촌 개혁
12기 3중전회 (1984. 10.)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	- 도시 중심의 경제체제 개혁 - 정부와 기업의 분리
13기 3중전회 (1988. 9.)	임금 및 가격 개혁의 초보적 방안 (关于价格、工资改革的初步方案)	- 가격 및 임금 개혁
14기 3중전회 (1993. 1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결정 (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 경제체제 개혁: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틀 제시,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발전, 시장의 기초적(basic) 역할 - 20세기 말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초보적 건립
15기 3중전회 (1998. 10.)	농업과 농촌 업무에 관한 결정	- 농업 및 농촌 개혁 심화
16기 3중전회 (2003. 10.)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 결정 (关于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 경제체제 개혁: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 7대 임무 제시 - 통일된 현대화 시장경제 구축
17기 3중전회 (2008. 10.)	농촌 개혁 발전에 관한 결정 (中共中央关于推进农村改革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	- 농업·농촌 개혁 및 발전
18기 3중전회 (2013. 11.)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 전면적 개혁 심화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 완성과 발전 - 14개 분야 개혁조치 발표
19기 3중전회 (2018. 2.)	당과 국가기구 개혁 결정,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	- 공산당과 정부기구 개혁을 통한 당의 역할 강화
20기 3중전회 (2024. 7.)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 (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	-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 중국식 현대화 추진 목표 -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자료: 양평섭(2024), KIEP 내부 간담회 자료.

2. 「결정」의 주요 내용²⁾

가. 「결정」의 구성 및 개혁 목표

■ 「결정」은 개혁의 필요성 및 목표를 비롯하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환경, 국가안보 및 국방 등 분야별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구성됨.

- 15개 부문 중 ‘(1) 개혁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의의와 총체적 요구’는 총론에 해당하며, 마지막 ‘(15) 당의 영도 수준 제고’는 전체 개혁에 대한 당의 지도·관리 강화를 의미함.³⁾
- 「결정」에서 경제 분야 개혁과제는 (2)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3) 고품질 발전 촉진, (4) 전면적 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5) 거시경제 거버넌스 개선, (6) 도농 융합발전, (7) 경제 개방의 6개 부문에 폭넓게 해당됨.
- 경제개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은 (9) 법치 개선, (10) 문화, (11) 민생, (12) 생태환경, (13) 국가안보임.
- 기타 부문으로는 (8) 전 과정 인민민주제 개선, (14)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가 있음.

■ [개혁 목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견지하면서 ‘2029년까지 본 「결정」에서 제안한 개혁과제 완성’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함.

- 개혁 심화의 전체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견지 및 개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 추진이며, 2035년까지의 목표와 함께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의 목표가 새롭게 제시됨.
 - 앞으로가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 및 민족 부흥의 위업 실현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며, 현대화 성과 확대, 대내외 중대한 위험·도전 대응, 전략적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개혁 심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 구축하고,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목표의 7대 중점 분야는 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②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 ③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④ 인민의 삶의 질 향상, ⑤ 아름다운 중국 건설, ⑥ 더 높은 수준의 안전한 중국 건설, ⑦ 당의 지도 수준 및 장기집권 능력 제고임.
- 5년 후이자 건국 80주년인 2029년을 새로운 목표 시기로 설정하여 「결정」에 명시된 개혁과제 완성을 제시함.

■ [당의 지도 강화]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이 모든 지역과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중앙의 집중통일영도(集中统一领导)를 강조함.

- 당 중앙이 개혁의 전반적인 설계와 조정·이행을 이끄는 한편, 각급 당 위원회는 중앙의 결정을 관철하여 담당지역의 부서 개혁을 추진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개혁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함.

2) 中国政府网(2024. 7. 21.), 「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 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검색일: 2024. 7. 22.)을 정리하고 분석함.

3) 央视新闻(2024. 7. 22.), 「60条要点速览二十届三中全会《决定》」.

- 20기 1중전회(2022년) 당 인선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총서기의 측근으로 채워지고 당 헌장에 '집중통일영도 수호'가 삽입되면서, 기존의 집단지도체제는 무너지고 집중통일영도 체제로 전환됨.

나. 경제 분야 개혁과제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관리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특히 국유 자산·기업의 핵심기능·경쟁력 강화, 요소시장 개혁, 공공 주도의 내수 육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공유제경제가 주체가 되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지도하는 '두 가지 확고(两个毫不动摇)'한 원칙을 고수함.
 - [국유기업 개혁] 국유경제의 배치 최적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유자본을 중요·전략 산업 및 핵심·공공 분야에 집중시키며, 경제부가가치(经济增加值, EVA)⁴⁾ 평가 등 국유기업 평가제도를 국유 기업이 전략적 임무를 수행(완수)하도록 개선함.
 - 국유자본을 국가안전, 공공 서비스, 전략적 신산업, 공익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에너지, 철도, 통신, 수자원, 공공사업 등 산업의 경우 자연독점 단계에는 국유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
 - [민영경제 발전 촉진] 「민영경제촉진법(民营经济促进法)」 제정, 민간기업의 공공 인프라 사업 참여기회 확대 및 국가기술연구과제에 대한 주도적 참여 지원, 금융지원정책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임.
 - [전국 통일대시장⁵⁾ 구축] 전국 통일시장 및 공정경쟁을 제약하는 규정·관행을 폐지하고 시장 규칙·표준을 개선하면서, 생산요소시장을 개혁하고 내수 확대의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함.
 - 국가 표준체계 개선 및 지방 표준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경쟁 심사 등을 강화
 - 생산요소의 원활한 흐름과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생산요소의 전국시장 통일 및 가격시장화를 추진하면서 물·에너지·교통 분야의 가격개혁, 통일된 전력시장 구축, 에너지 관리제도 개혁 등을 추진
 - 정부 투자의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부 투자가 사회(민간) 투자를 주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민간)자본의 투자활력 자극 및 투자시행 촉진 등을 추진하면서,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 메커니즘 개선, 공공 소비의 합리적 증대를 도모
 - [시장경제 기본제도 완비] 모든 형태의 경제적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새로운 업태·분야의 시장진입 제도를 비롯하여 기업·개인의 파산제도 및 기업 퇴출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함.

■ [경제 고품질 발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⁶⁾을 △현지 여건에

4) 여기서 경제부가가치는 기업의 세후 순영업이익-자본비용(=조정자본×평균자본비용비율)이며, 여기서 자본비용은 지분·부채 비용을 의미함. 경제부가가치 지표는 기업이 주주를 위해 창출한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포괄적인 재무성과 지표로, 국유자본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기업의 순자산 수익률 향상을 촉진함. 李锦: 对三中全会提出国有经济增加值核算的解读(2024. 7. 20.).

5) 전국 통일대시장은 상품 및 생산요소에 대해 지역 간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이동을 구현함으로써 최적화 및 효율화된 시장을 의미함. 문지영 외(2023),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용 전망과 시사점」, p.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2023년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주창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고기술·고효율·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력으로, 주된 특징은 '혁신'이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핵심요소는 신산업·신모델·신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임. 중국 관련 언론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노동과 자본 중심의 전통적인 양적 성장(생산력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첨단과학기술, 고효율, 고품질이 특징인 선진 생산력을 의미한다고 설명. 정지현 외(2024),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p. 3~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맞게,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부펀드·인내자본을 활용하여 발전시키면서 디지털 전환, 공급망 경쟁력 및 경제안보 등을 강화할 방침임.

-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및 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초점을 맞춰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정부 투자 펀드의 역할 강화 및 인내자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표준 개선을 통해 전통산업 고도화 및 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지원하고, 환경보호·안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선진 생산요소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제고
-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 통합] 제조업의 고급화·지능화·그린 발전 촉진, 산업기금 관리제도 최적화 및 제조업 비용·세금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산업화 및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정책을 개선할 방침임.
 - 산업공통기술 플랫폼 구축, 플랫폼 경제의 혁신 발전 및 관리제도 개선, 데이터 관련 공유 인프라 및 재산권 제도 구축, 효율성·편리성·안전성을 갖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메커니즘 구축 등을 추진
- [서비스업 발전] 생산자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과 지역 간 행정장벽 제거를 추진하면서, 생활 서비스 산업의 다양화 및 중개서비스기관 제도 개선 등 서비스업 지원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현대적 인프라 구축] 저고도 경제, 종합교통 시스템 등 신형 인프라 및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일반 항공 및 저고도 경제의 발전과 유료도로 정책의 최적화를 촉진하면서 해상보험의 담보능력 및 국제 서비스 수준 제고, 해상 중재제도 혁신, 철도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
- [산업·공급망 유연성 및 안전수준 제고] 핵심 산업사슬의 발전체계 강화, 산업·공급망의 안전·위험 평가 및 대응 시스템 마련, 국가 비축제도 및 전략광물 안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 집적회로, 산업기계, 의료장비, 기본·산업 소프트웨어, 선진재료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연구 및 성과 응용을 촉진하면서 산업의 질서 있는 국내이전 시스템을 구축

■ [전면적 혁신 지원체계 구축]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적·전략적 자원인 교육, 과학기술, 인재 시스템을 개혁하여 국가혁신체제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임.

- [교육] 과학기술 교육 강화,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전략 수요에 따른 학과 조정 및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교육자원의 지역적 배치 최적화, 인구 변화에 부합하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 발전 및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자 함.
 - 높은 수준의 해외 이공계대학의 중국 내 협력 교육을 위한 교육개방 추진, 직업교육 시스템 개선
- [과학기술체제] 국가전략기술 역량 강화, 연구기관·대학·과기선도기업 배치 최적화, 국제협력 확대,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 강화,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 효율성 제고, 국가 기술이전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중앙재정 과학기술자금의 배분·관리 제도 개선, 정부재정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과기인력(과학자 등)의 수익 분배 자율성 확대, 국가 중점 과기업무 및 과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중국 내 국제 과학기술 조직 설립 장려, 과학기술 분야 대학·연구소·협회의 대외협력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국제협력 확대
- [인재 육성] 국가전략 분야 과기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인재의 지역 이동제도 개선, 청년 과기 인재 처우

보장, 실적·기여도 기준의 인재평가 시스템, 해외 인재 유치·지원 제도 개선 및 첨단기술 인재 이민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거시경제 거버넌스 개선]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예산 건전성 제고, 중앙-지방 간 자원 배분의 균형화, 금융의 실물 지원 및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거시정책] 국가전략의 거시 방향성 제시·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전략의 계획과 실행(거시정책) 간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재정·통화·산업·가격·취업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국가커시 대차대조표⁷⁾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거시정책 일관성 평가범위에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을 모두 포함
 - 기대관리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신경제 분야의 통계 편입 등 고품질 발전 관련 통계지표 시스템 구축
 - [재정·세제 개혁] 자원 확대 및 예산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예산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세 등 지방정부의 세원 증대, 재정지출 중 중앙정부 비중 확대, 재정과 직권 연계 등을 통해 중앙-지방의 균형적 재정관계를 도모함.
 - 정부 예산관리 범위에 행정권·정부신용·국유자원·국유자산으로 창출된 수익 전체를 포함하고, 국유자본운용예산 제도를 개선하면서, 중점·핵심 영역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득세 등 직접세 제도 개선 등을 추진
 - 소비세·토지유지세·교육부가세 등을 지방세수로 전환하고, 중앙-지방이 세원을 공유하는 공유세에서 지방 배분비율을 높이면서 지방부채 관리제도 및 음성부채 리스크 예방 시스템 마련과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개혁을 추진
 - [금융개혁]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확대, 금융 리스크 해소를 위한 금융 안정성 확보를 중점 추진할 방침임.
 - 실물경제 지원은 과학기술·녹색·포용·양로·디지털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 비중 확대 및 국유 금융자본 관리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금융 안정성 확보는 상장기업 관리 등 자본시장 리스크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금융법 제정, 금융안전보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진
 - 한편 금융 개방은 위안화 국제화 지속 추진, 네거티브리스트 및 내국민대우 개선, 조건부합 외자기관의 금융시범 사업 참여 지원,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확대
 - [지역협력발전 전략 개선] 상호보완적인 지역경제 배치 및 국토 공간의 최적화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서부 대개발, 동북 전면진흥, 중부 굴기 및 동부 현대화 추진정책을 개선하고, 고품질 발전의 동력원으로 3대 경제거점(진징지, 장강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⁹⁾)의 역할을 강화
 - 장강경제벨트의 발전 및 황하유역의 생태보호·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면서 고표준·고품질로 승안신구(雄安新区)를 건설하고, 청위(成渝)경제권(청두-충칭)을 구축
 - 주요기능구역(主体功能区)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구 간 협력 발전 및 동·중·서부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해양경제발전 촉진제도를 개선

7) 국가커시 대차대조표는 국가의 자산·부채 총량 및 구조를 반영한 통계표로서, 거시경제 분석·식별과 리스크 관리에 사용되며, 중국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따른 국가자산 구조를 관리하고자 함. 21经济网(2024. 7. 24.), 「二十届三中全会学习辅导百问解读: 为什么要探索实行国家资产负债表管理」,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40724/herald/e60964be53bd7bf6e8c38a7423c29d19.html>(검색일: 2024. 7. 24.).

8) 기대관리(Expectation management)는 정부가 국민과 정보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목표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대를 인도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목표를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기대치의 관리와 지도). 중국 특색의 기대관리는 통화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거시경제 통제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며, 단기적 기대관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기대관리도 포함됨. 中国社会科学网(2023. 8. 15.), 「以中国特色预期管理推动高质量发展」.

9) 진징지(京津冀)는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장강삼각주(长三角)는 상하이-저장-장쑤(안후이) 일대,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는 광둥-홍콩-마카오(Great Bay) 지역으로, 중국의 3대 경제발전거점(북부, 중동부, 남동부)임.

- [도농 융합발전] 신형도시화, 농촌진흥 및 신형공업화를 통합 추진하고 도시·농촌의 계획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도농 간 생산요소의 평등한 양방향 흐름, 격차 축소 및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신형도시화 촉진] 도시 이주 농민에 대한 호적·사회보장제도 개선으로 농민(공)의 시민화를 가속화하고, 도시 정착 농민의 토지도급권·택지사용권·집체수익분배권 등 합법적 토지권익을 보호할 방침임.
 - 집약적 도시계획,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재개발 정책 등을 추진
 - [농촌관리체계 개선] 2차 토지도급(土地承包) 만기 이후 30년 연장방안 마련, 도급토지의 소유권·도급권·경영권 분리를 통한 적정 규모의 영농 촉진, 도급토지 경영권의 양도(유통) 가격제도 개선, 신형 농촌집체경제 발전 등을 통해 재산권 및 분배제도를 개선하여 농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농업·농촌 지원] 다원화된 식품공급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신业态 육성, 농업 보조금제도 개선 및 농업보험 발전, 빈곤·재빈곤 방지, 농산물가격 합리화, 식량생산지역에 대한 이익보상 시스템 구축, 식량 구매·판매·비축관리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 [토지제도 개혁] 경작지 품질 제고를 중심으로 경작지 점용·보충균형(耕地占补平衡) 제도¹⁰⁾를 개선하고, 농민(합법)소유주택의 임대·출자·합작 등을 허용하면서, 거시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주도산업 및 중점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농촌집체경영 건설용지의 시장 편입 개혁을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의 분배제도 등을 개혁
 - 도시 건설용지의 신규 개발 한도는 상주인구 증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 상·공업용 토지 사용을 최적화하면서 산업단지 용지의 특별관리 등을 추진
- [높은 수준의 개방] 국제 규범·표준 수준으로 제도 개방을 확대하면서 수출통제 등 무역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물류 인프라 건설 및 중국기업의 해외투자(ODI)를 촉진하면서 외국인투자(FDI)에 대한 개방 범위 확대와 권익보호 강화를 추진할 방침임.
 - [제도 개방 확대] 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환경 표준, 노동 보호, 정부 조달, 전자 상거래 및 금융 분야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시장의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고자 함.
 - WTO 등 다자무역체제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개혁에 적극적 참여하여 FTA 네트워크를 확대
 - [무역제도 개혁] 무역정책과 재정·조세·금융·산업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그린 전환 및 글로벌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면서도 수출통제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임.
 - 무역의 디지털화 및 그린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통관, 세무, 외환 등 규제 혁신을 촉진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건설 촉진, 적격지역에 국제물류 허브 및 벌크제품 배분 허브 건설 등 지원
 - 무역 리스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출통제 및 무역구제 시스템 개선
 -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리스트 시행, 서비스 무역 시범지역 추진, 국경 간 금융 서비스 제도 개선
 - [FDI/ODI 관리제도 개혁] 외국자본의 중국 내 투자(FDI)에 대한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권익 보호를 강화 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ODI) 촉진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공급망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10) 건설에 의해 점용된 경작지 양과 동일한 양·질의 경작지를 보충하는 제도, 「결정」에서는 각종 경작지 점용을 통합 관리하고 새로 보충된 경작지의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하면서, 농지 건설·검사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농작물 재배용 경작지 보장제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확대 및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제조업 부문의 모든 시장접근 제한 폐지, 통신·인터넷·교육·문화·의료 등 점진적 개선
- 생산요소 획득, 자격 인허가, 표준 제정 및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 보장
- [지역 개방] 지리적 우위를 활용한 지역 개방과 지역 간 분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자유무역시범구(FTZ)를 업그레이드하며 자유무역항(하이난) 건설 가속화, 홍콩의 무역 허브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 동부 연안지역은 선도적 개방, 중서부·동북 지역은 개방 수준 제고를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요 교통거점 지역 간 협력 확대 추진
- 홍콩의 국제 금융, 해운 및 무역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과의 협력 심화
-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 녹색개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에너지, 조세, 금융, 재해 예방 및 관리 등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중점 시행할 방침임.

다. 경제 유관 분야 개혁과제

- [법치 강화] 입법·행정·사법 전 분야에서 법·제도 구축을 강화하면서, 특히 외국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외국과 관련된 입법·법 집행, 법률 서비스 및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사법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 비즈니스 중재·조정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글로벌 일류 중재기구와 로펌을 육성하면서 글로벌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 [문화 시스템 개혁] 문화 분야 개혁은 이념 학습 및 교육(애국주의 고취 등), 문화 서비스·상품 공급제도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선, 국제적인 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임.
 - [문화 서비스·제품 공급 개선] 중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기층에 잘 전달하고 문화·과학기술을 융합한 교육 시스템 모색, 산업태 발전, 문화·엔터테인먼트 종합 관리, 문화·관광 융합 발전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선] 뉴스 홍보 및 온라인 여론을 통합 관리하면서 생성형 AI 발전 및 관리 제도와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업무를 개선하고, 사이버 공간의 법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글로벌 방송 시스템 구축] 주류 미디어의 국제방송 시스템 혁신, 외국대상 방송 제작, 중국담론 시스템 구축 강화 등을 통해 영향력 있는 글로벌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민생 개선] 소득분배, 고용, 사회보장, 의료보건,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임대·구매 주택을 포괄하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소득분배] 1·2·3차 분배¹¹⁾ 제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중산층 확대, 과도한 소득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소득분배 제도의 규범화를 추진할 방침임.

11) 1차 분배는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며, 2차 분배는 세금 등에 따른 재분배, 3차 분배는 기업 및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임.

- 근로자의 임금 결정·인상·지급보장 제도 개선, 세금·사회보장·이전지급 등 재분배 제도 개선, 공공 자선사업 발전 지원 등과 함께 국유기업의 임금 결정 시스템을 개혁
- [취업 우선] 대졸자·농민공·퇴역군인 대상 취업 지원제도 개선, 도농 취업 시스템 통합, 창업 촉진 및 새로운 취업 형태¹²⁾ 지원 등을 통해 공공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구조적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사회보장제도 개선] 양로·의료 보험의 전국 통합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적용 범위 확대, 임대-구매 주택을 포괄하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 현지 상황에 맞는 부동산 정책(주택구매 제한 완화/폐지 등) 시행, 부동산 개발 융자방식 및 사전분양 제도 개혁, 부동산 세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유연근로·농민공·신입태 종사자로 확대하고, 적용 범위를 실업·산재·출산보험으로 확대하며, 취업한 지역에서 보험 가입 시 호적에 따른 제한을 철폐
-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 리스크 모니터링·조기경보·유행병 역학조사 기능 강화, 의료·의료보험·의약 산업의 통합 발전 추진, 우수 의료자원 확대 및 지역 균형 촉진, 민영병원 발전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저출산·고령화 대응] 출산에 우호적인 사회 구축 및 실버경제 발전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고자 함.
 - 출산·양육·교육 비용 완화, 출산 휴가·보조금 제도 개선, 공공의료 수준 제고, 다양한 보육지원 제도 마련
 - 양로 사업·산업 제도 개선, 실버경제 발전, 노인 일자리 창출, 자발적·탄력적인 퇴직연령 연장개혁의 점진적 추진, 양로시설 운영 등에 기업의 참여 장려
- [생태환경 개혁 강화] 생태환경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녹색·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조세, 금융, 투자, 가격 정책 및 표준제도를 개혁하고자 함.
 - 배출 허가제 중심의 오염원 감독, 오염물질 공동 감축, 중요 구역·공원 등의 보호·관리 제도, 해양자원 개발·보호, 천연자원 유상 사용, 생태환경 피해 보상 등 법률 기반의 생태환경 관리제도를 강화할 방침임.
 - 녹색 저탄소 산업 발전 및 소비촉진정책 강화, 자원 총량 관리 및 절약 시스템 개선, 폐기물 재활용 강화,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탄소배출 통계, 탄소 표시·인증, 탄소 발자국 관리, 탄소시장 거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관련 제도 개선
- [국가안보]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 관련 안보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국가안보 체계·기술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대응 및 관련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공공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임.
 - 생산 관리, 식품·의약품 안전 책임, 생물 안전 관리, 인공지능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제도 강화
 -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조기경보, 예방·통제, 보호), 해외에서 자국민과 자국 법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 강화, 안보 분야의 국제법 집행 협력 등을 강화하면서 외국의 제재·간섭·확대관할권에 대한 대응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또한 해양 권익보호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을 추진

12) 주로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경제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 모델을 가리킴.

3. 주요 경제정책 방향 전망

- [목표 견지, 개혁 속도 제고] 개혁 목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 및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이나, 2029년을 새로운 목표 시점으로 설정함에 따라 개혁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 18기 3중전회(2013년, 시진핑 1기 3중전회)에서는 2020년까지 핵심 부문·단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표한 데 반해, 이번에는 5년 후인 2029년까지 「결정」에 제시한 개혁과제를 완성하겠다고 공표함.
 - 향후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결정」에 포함된 300여 개 개혁조치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개혁의 긴박성, 대내외 리스크의 엄중함, 집권시기 성과 창출 및 연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시진핑 1기 3중전회(2013년) 「결정」¹³⁾과 비교하면 이번 「결정」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교육·과학기술·인재의 전면적 혁신, 실물-디지털 경제 융합, 공급망 강화, 부동산 개혁, 고령화·저출산 대응, 국가안보 강화(비전통안보) 등이 새로운 개혁과제로 등장함.
 - 이와 함께 국유기업, 거시·금융, 재정·세제(지방정부 부채), 대외개방, 토지제도, 민생, 문화,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개혁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제시됨.

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시진핑 지도부의 발전목표인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 고품질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새로운 발전방식이자 동력으로 강조됨에 따라,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국가자원 집중과 기술혁신, 생산요소의 최적 배치, 산업고도화 관련 각종 정책이 전 지역 및 산업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주창자인 시진핑 총서기는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생산력 이론으로 지도해야 함을 강조함.
 - 현지 여건에 맞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강조한 것은 적극적·진취적 참여 및 모두의 참여를 의미함.
 - 헤이룽장은 바이오산업(바이오 농업·제조·에너지 등), 하이난은 종자산업·항공우주·해양경제, 항저우는 스마트 IoT·바이오의약·첨단장비·신재료·그린에너지 등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 추진
 - 풍부한 인적자원 및 과학연구 역량을 보유한 징진지, 장강삼각주, 웨강아오는 중국의 고품질 발전 동력원으로 신산업·미래산업 우위를 강화
 - 새로운 동력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 기존 모델을 없애지 않고(공백 방지) 새로운 동력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낙후·과잉 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안정적인 산업 변혁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자 함.¹⁴⁾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효율성이 낮고 자원점유율이 높으며 환경 리스크가 큰 기업’의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배터리 등 고효율 및 그린 분야의 기업 비중 제고를 추진
 - 각 지역의 생산요소가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추진

13) 2013년 11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시진핑 1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

14) 人民日报(2024. 8. 12.), 「如何因地制宜发展新质生产力」.

-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중점 발전시킬 전략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및 양자기술 등 8대 산업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해당 산업 발전정책과 정부 투자펀드 및 인내자본 활용 등이 강화될 전망
 - 지난 7월 30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신산업과 미래산업의 육성 및 확대’, ‘가젤기업 및 유니콘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원’ 등을 강조
- 이와 함께 전통산업에 신기술·신소재 등을 적용한 전통산업의 고도화(무인 광산, 스마트 부두 등) 역시 강조
 -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에 있어 낙후된 산업은 없고 낙후된 기술만 있음.¹⁵⁾
-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핵심요소인 기술, 생산요소, 산업의 혁신 발전이 이번 「결정」의 주요 개혁과제임.
 - 과학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인재 혁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자본·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기술, 지식, 데이터 등을 핵심 생산요소로 중시하며 기술혁신이 산업 고도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
 -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장리 원장은 전국 통일의 대규모 시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생산요소가 선진 제조업에 효율적으로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디지털 융합 및 서비스업 강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제 발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생산자 서비스업 발전 등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할 방침임.

-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및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개발·응용하고, 공유경제·플랫폼 경제·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이 생산 효율성 및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저고도 경제, 종합교통 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규 분야의 표준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 도심항공교통 등 신규 디지털 인프라 및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표준 구축을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 및 신산업·전략산업 주도권 확보 등을 추진
 - 중국에서 저고도 경제는 전통적 범용 항공방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드론 기반의 저공 생산·서비스 방식을 결합하여 공업·농업·서비스 등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그 규모는 2023년 5,000억 위안 초과, 2030년 2조 위안에 달할 전망
- 디지털 경제 핵심인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개혁(시장 가격, 시장 거래, 재산권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실물경제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물류, 금융, 정보 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
 - 포용적 금융 및 금융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혁신 촉진을 지원
 - 스마트 물류 및 콜드체인 물류 등은 공급망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업비용 절감에 긍정적

15) 中国发展改革(2024. 8. 15.), 「健全因地制宜发展新质生产力体制机制」.

- **[전면적 혁신]** 글로벌 수준의 기술 응용 혁신 및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체제 혁신과 함께 국가전략 분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합 추진할 방침임.
 -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주요국의 대중국 기술견제 등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필수적인 인재의 육성 및 역량 강화 시스템을 기술혁신체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재정 중 과기 예산의 비중을 제고하고, 과기 혁신에 적합한 과학기술 금융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며, 그동안 소극적이던 과기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장려를 추진하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및 과학기술 선도기업 육성제도를 강화할 전망이다.
 - 2024년 중앙정부 예산 중 과학기술 예산은 10% 인상되어 국방비 예산 증가율(7.2%)을 추월함.
 - 또한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연구성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연구성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 첨단기업 세금 경감, 국가전략 수요에 따른 대학 학과 조정, 국가기술 이전체제 강화, 해외 인재 유치·지원 제도 강화 등이 추진되고 첨단기술 인재의 이민제도 도입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 **[공급망 강화]** 중국의 병목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집적회로, 산업기계, 의료장비, 계측기기, 기본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및 선진재료 등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결정」에서 위 7대 산업의 질서있는 국내이전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 만큼, 2029년까지 해당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 관련 지원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의 공급망 비교우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광물자원의 생산, 공급, 저장 및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안보 시스템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할 전망이다.¹⁶⁾
 - 이와 함께 기업의 재고 및 물류 비용 축소, 시장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국제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 비중이 확대된 임대-구매 주택 병존의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을 구축하면서 부동산 거래, 부동산 개발 용자방식, 부동산 세수 등 정책을 사회보장제도 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전망이다.
 - 이번 「결정」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리스크인 부동산 관련 개혁정책을 거시·금융 개혁이 아닌 민생 부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국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성장동력이 아닌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민생 복지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은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면서, 그간 성장동력 역할을 해온 부동산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에 더욱 적극적일 것임.
 - 또한 중국이 지향하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을 임대-구매 주택을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현재의 상품주택 중심의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 7월 30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정부가 기존 상품주택을 매입하여 보장성(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부동산 발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주문

16) 央视新闻(2024. 7. 26.), 「发展新质生产力,推进数实融合……三中全会《决定》做出部署!」.

- 향후 정부의 주택 매입 조건, 임대주택 제공 대상 및 조건, 정부의 주택 매입자금 조달 규모 및 방식, 임대주택과 기존 상품주택의 안정적 비중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노동)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 연장, 출산 관련 지원, 실버경제 발전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산업 자동화 및 로봇 산업, 실버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증대될 전망이다.

- 이번 3중전회에서 처음으로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자발적·탄력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¹⁷⁾

○ 중국은 1970년에 정한 법정 정년제도(남성 60세, 여성 50세 또는 55세)를 유지해 왔으나,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심화에 따라 18차 당대회에서 '법정 정년의 점진적 연장 검토'를 제시한 바 있음.

○ 정년 연장은 연금 및 노인 부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청년 등 다른 연령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일괄적 합의가 어려웠으며, 이에 이번 3중전회에서는 정년 연장 개혁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됨.¹⁸⁾

- 출산에 우호적인 사회 구축 및 실버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도 디지털 기술 및 제조업 혁신 발전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의 범용화 및 지능화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양로·의료 산업, 실버상품·서비스 관련 수요도 늘고 있음.

■ [국가안보] 국가안보를 「결정」에 새롭게 포함하고 포괄적 개념을 명시하는 등 중시하고 있어 생태학적, 재정적, 자원 관련 리스크 등 비전통 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응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¹⁹⁾

- 각급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

- 특히 △생물 안전 감독, 조기경보, 예방 및 통제 시스템 개선,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 강화, △인공지능 보안 감독 시스템 구축, △대외 국가안보 메커니즘 개선이 새롭게 제시되어 관련 안보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나. 경제 부문별 정책 방향

■ [국유기업 개혁] 국유자본을 국가안전·국민경제 관련 핵심 분야와 전략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자원배분에 있어 정부의 개입 및 관리를 중시하고 있어 민영경제의 활력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

- 18기 3중전회에 이어 이번에도 공유제의 중심적 위상과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번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 시장실패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²⁰⁾

17) 第一财经(2024. 7. 22.), 「中央首次将“自愿、弹性”列为延迟退休原则」.

18) 3중전회 결정문에서 정년 연장의 자발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국민일보(2024. 7. 24.), 「막 내린 中 3중전회... 어려움 인정했지만 '당·국가 주도' 고수」.

19) 中国新闻网(2024. 7. 23.), 「(聚焦三中全会) 增强维护国家安全能力, 《决定》释重要信息, <https://baijiahao.baidu.com/s?id=1805357861457170747&wfr=spider&for=pc>(검색일: 2024. 7. 24.).

- 전력시스템 개혁(‘管住中间、放开两头’)²¹⁾, 에너지 가격개혁, 전국 통일의 전력시장 구축 등 분야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²²⁾
- 18기 3중전회에서는 국유자본이 통제하는 영역을 자연독점 산업으로 국한했던 반면, 이번에는 국가의 중요 분야·산업에 대한 국유자본의 집중을 강조함에 따라 국가전략에서 국유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국유자본을 ① 국가 안전 및 경제의 중요한 산업과 핵심 분야, ② 공공 서비스 및 공익성 분야, ③ 전략적 신흥산업의 3대 분야에 집중시킬 방침임.²³⁾
 - 이는 중국에서 국가 주도의 핵심·전략 산업 육성 및 관리감독 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국유자본 중심의 국가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유자본의 산업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바,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을 ‘규모·속도 증대’에서 ‘품질·효율성 향상’으로 전환하고, 국유기업 평가에 효율성 관련 지표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몇 년 동안 국유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체계를 ‘1개 이윤지표와 5개 비율지표(一利五率)’로 변경²⁴⁾함으로써 국유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자본제약 완화 및 자금 활용 효율 제고 등에 기여
 - 이번 「결정」에서는 과거 도입한 바 있는 경제부가가치(EVA)²⁵⁾ 평가지표를 다시 새롭게 제²⁶⁾
-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중국의 오랜 과업으로 성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효율성이 높지 않더라도 신행거국체제(국가자원 총동원)의 효과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음.
- 한편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근래 크게 위축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경제촉진법」 제정 등이 제시되었으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

■ [재정·세제 개혁] 재정·세제 개혁은 예산수입원 확대, 소비세·토지부가세 등 입법화,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지출 구조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이번 3중전회에서 예산구성 항목 조정을 통한 예산관리에 방점을 뒀음에 따라, 행정권·국가신용 등의 사유로 정부 예산수입에 누락되었던 국유기업 자산소득이 예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 중국의 국유자산자원은 △비금융 국유기업자산, △금융 국유기업자산,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국유자연

20) 太平洋証券(2024. 7. 22.), 「长短期目标明确, 高质量发展为要」, p. 1.

21) ‘管住中间、放开两头’는 전력 시스템 개혁의 중요 지침으로, 송배전 부문(管住中间)과 발전(전력생산)·소비 부문(放开两头)에 대한 개혁 방향을 뜻함. 송전과 배전 부문은 자연 독점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가 이 부문을 강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가격 책정 및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는 한편, 전력생산(발전)과 소비(사용) 부문은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

22) 中信建投(2024. 7. 23.), 「中信建投：二十届三中全会决定稿学习体会」, <https://mp.weixin.qq.com/s/83iiB5Fht27PFg-AKA0Dog>(검색일: 2024. 7. 22.).

23) 국유자본의 3대 집중은 국유기업의 부가가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산업 경계를 축소하여 민영경제에 더 많은 발전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라고 함. 西京研究院(2024. 7. 24.), 「二十届三中全会公报及(决定)关键领域解读」, <https://mp.weixin.qq.com/s/qBYym9VPB7Aakjh8npLvFg>(검색일: 2024. 7. 23.).

24) ‘1개 이윤지표와 5개 비율지표(一利五率)’는 이윤총액 지표와 ① 자산 부채율, ② 자기자본수익률(ROE), ③ 전체 직원 노동 생산성, ④ 연구개발비 투자 강도, ⑤ 영업 현금 비율을 의미함. 참고로 이전에는 ‘2개 이윤지표와 4개 비율지표(两利四率)’를 활용하였음(순이윤과 이윤총액, ① 영업수입이윤율, ② 자산 부채율, ③ 연구개발비 투자 강도, ④ 전체 직원 노동 생산성). 人民网(2023. 12. 27.), 「2024年央企发展目标：“一利”稳定增长“五率”持续优化」, <https://baijiahao.baidu.com/s?id=1786418935110079984&wfr=spider&for=pc>(검색일: 2024. 7. 25.).

25) 경제부가가치(영업이익-자본비용)는 국유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방법으로, 2023년 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의 2024년 업무를 배치할 때, ‘부가가치’, ‘기능가치(功能价值)’, ‘경제부가가치’, ‘전략적 신흥산업의 수익과 부가가치 비율’, ‘브랜드 가치’의 5대 가치 향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金融界(2024. 7. 22.), 「三中全会《决定》的十五项关键细节」, <https://baijiahao.baidu.com/s?id=1805241178747141725&wfr=spider&for=pc>(검색일: 2024. 7. 23.).

26) 2009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중앙기업 책임자의 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잠정조치’에서 경제부가가치 지표를 도입함.

자원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11개 금융 국유기업의 순이익(2020년 기준 131.7억 위안)이 예산편성에 누락²⁷⁾

- 이번 3중전회 이후 18개 세금 항목에서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세목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비세, 토지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입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²⁸⁾
 - 2019년 소비세와 토지부가가치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이 공개되었고, 2023년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상황으로, 이들 세금 항목에 대한 입법 여건은 이미 조성되었음.²⁹⁾
- 한편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의 입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동산세는 2021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행 중이며, 향후 도시토지사용세와 함께 입법화가 추진될 수 있음.
 - 다만 부동산세의 전면 도입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단기간 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전문가도 다수 존재³⁰⁾
- 지방정부 재정여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 중 하나인 소비세의 징수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유하는 6개 공유세의 지방정부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정책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와 함께 중국의 주요 세수원으로 2023년 기준 소비세 규모는 1.6조 위안에 달하며, 소비세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편입될 경우 지방정부 재정이 13.8%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바,³¹⁾ 지방정부 재정적자의 10% 이상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³²⁾
 - 전체 세수의 78%를 차지하는³³⁾ 중앙-지방 공유세는 부가가치세, 기업·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6개 항목으로, 중앙-지방 배분비율은 부가가치세가 5:5, 소득세가 약 6:4임.
- 또한 중앙정부가 예산지출을 계획하고 지방정부가 실제 지출을 감당하는 비대칭적 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출 확대와 직권 확대가 연계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 [금융개혁] 금융개혁은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와 금융 안정성 확보(금융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전망으로, 자본시장의 개방 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은행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금리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화정책 전달기제를 개선하여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을 완화할 방침임.³⁴⁾³⁵⁾
 - 7월 22일 인민은행은 1년/5년 만기 LPR을 각각 0.1%p 인하하였으며, 7일 역RP도 1.8%에서 1.7%로 인하함.

27) 中国审计署(2021. 6. 7.), 「国务院关于2020年度中央预算执行和其他财政收支的审计工作报告——2021年6月7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九次会议上」, <https://www.audit.gov.cn/n5/n26/c145346/content.html>(검색일: 2024. 7. 25.).

28) 新浪财经(2024. 7. 24.), 「宏观研究报告: 三中之后的财税改革(深度解读)」, https://stock.finance.sina.com.cn/stock/go.php/vReport_Show/Kind/lastest/rptid/775174822606/index.phtml(검색일: 2024. 7. 25.).

29) 税屋(2024. 3. 8.), 「2024立法要点: 制定增值税法」, <https://www.shui5.cn/article/ad/43319.html>(검색일: 2024. 7. 25.).

30) 第一财经(2024. 8. 13.), 「三中全会的四点信号」.

31) 金融界(2024. 7. 23.), 「全面解读“三中”财税改革」, <https://m.jrj.com.cn/madapter/stock/2024/07/23084741725461.shtml>(검색일: 2024. 7. 25.).

32) 唐明, 卢睿(2020), 「消费税下划地方改革的政策效应及分享方案设计——基于数值模拟」, 『财贸研究』, p. 72.

33) 2023년 기준(CEIC DB, 검색일: 2024. 7. 26.).

34) 人民银行(2024. 7. 19.), 「中国人民银行党委召开会议 传达学习党的二十届三中全会精神」,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409948/index.html>(검색일: 2024. 7. 25.).

35) 中金证券(2024), 「三中全会和降息的金融信号」, p. 1.

- 금융발전 5대 분야인 기술금융, 녹색금융, 양로금융, 포용금융, 디지털 금융이 다시 금융발전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직접금융 비중 확대를 통한 자금조달 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4월에 발표된 「리스크 예방 및 감독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의견(关于加强监管防范风险推动资本市场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이하 「국9조(国九条)」³⁶⁾와 일맥상통하며, 향후 「국9조」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들(「1+N」 정책)이 제시될 전망이다.³⁷⁾
 - 「국9조」에는 ‘관리감독 강화 및 리스크 관리(强监管, 防风险)’ 중심의 자본시장 관리방침이 명시되었으며, 자본시장으로 중장기 자본을 유입하고 금융투자시장의 전 산업 밸류체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상장기업의 투자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보공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3중전회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기업기관에 대한 금융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올해 금융 관리의 중점 분야로 제시하면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 예방기제 개선, 금융감독총국의 리스크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정책이 추진될 예정임.³⁸⁾

■ [개방] 자국 내 제도 및 시장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양방향으로 개방 수준을 제고하면서도, 수출통제 등을 활용하여 무역 리스크를 관리할 전망이다.

- 국제 규범·표준에 부합하게 상품·서비스·자본·노동시장의 질서있는 개방과 함께, 통신·인터넷·교육·문화·의료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임.
-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및 대중국 투자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FDI)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정당한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³⁹⁾ 외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 정책들이 지속될 전망이다.⁴⁰⁾
 - 2024년 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의 안정이 강조되고, 3월에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발표⁴¹⁾
 - 「결정」에서 생산요소 획득, 자격 인허가, 표준 제정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내국민대우를 제시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물류 센터 구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ODI) 촉진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개도국 중심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중국기업 간의 녹색개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에너지, 조

36) 해당 의견은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의 강령성 문건으로, 세부 내용이 자본시장 9대 분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9조(国九条)」로 지칭됨. 新浪财经(2024. 4. 15.), 「A股新“国九条”出台, 和过去两次有何不同」.

37) 中泰证券(2024), 「二十届三中全会金融政策分析与展望: 政策基调延续」, pp. 1~6.

38) 东方财富网(2024 7. 22.), 「三中全会后 央行、金融监管总局释放重要信号」, <https://finance.eastmoney.com/a/202407213136180430.html> (검색일: 2024. 7. 25.).

39) 腾讯新闻(2024. 7. 23.), 「招银研究政策: 联合解读二十届三中全会: 于变局中开新局」.

40) 金融界(2024. 7. 24.), 「中信证券二十届三中全会公报学习体会: 向改革中要发展」, <https://baijiahao.baidu.com/s?id=1805096003043075666&wfr=spider&for=pc>(검색일: 2024. 7. 22.).

41) 中国政府网(2024. 2. 28.),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扎实推进高水平对外开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行动方案》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3/content_6940155.htm(검색일: 2024. 7. 22.).

세, 금융, 재해 예방·관리 분야 협력을 지원할 방침

■ [신형도시화 및 토지개혁] 도농 간 생산요소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여 자본, 기술, 인재가 다시 농촌에 유입되도록 하는 신형도시화 정책과 더불어 농민의 재산권 확대 및 중점 산업·프로젝트용 토지 보장 등을 중시하는 토지관리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 농민의 도시 이주·정착 촉진 및 택지권한 등 (토지)재산권 보장, 농촌의 신산업 육성, 농촌 및 도시의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통해 도농 간 생산요소의 평등한 양방향 흐름을 촉진하고, 도농격차를 축소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자본, 기술, 인재 등 생산요소가 다시 농촌지역에 유입되게 하는 것을 신형도시화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⁴²⁾
- 농민이 토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개혁은 17기 3중전회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3중전회에서 농민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주택(택지)의 임대·출자·합작을 허용함에 따라 관련 후속정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 경작지 및 택지, 농촌집체경영 건설용지 등 농민 소유토지에 대한 권한(소유권, 처분권, 사용·경영권)을 세분화하여 농민의 토지권익을 증대하고, 토지자원의 활용 및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
 - 농민 합법주택의 임대·출자·합작 허용은 농민이 합법적으로 집체토지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회투자 및 사회소비가 농촌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함.
- 도시에서는 거시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특정 프로젝트 및 중요 산업을 위한 토지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도시 상공업 용지 이용 최적화, 재고 토지 및 저효율 용지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 [민생 개선] 소득분배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주민 소득을 늘리는 민생보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이번 3중전회에서 모든 주민이 의료·양로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예방적 저축을 축소시켜 소비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⁴³⁾

■ [법치 강화]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대중국 제재 등 국제적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임.⁴⁴⁾

-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등에서 국제 비즈니스 중재센터 구축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60여 개 로펌 지사를 설립하는 등 외국 관련 법률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⁴⁵⁾
- 외국의 법률·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등 자국 내 법·제도 구축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문화] 공공 문화 서비스 확대와 함께 VR·A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면서도,⁴⁶⁾

42) 光明网(2024. 7. 24.), 「打通城乡融合发展的堵点卡点」, https://theory.gmw.cn/2024-07/24/content_37456541.htm(검색일: 2024. 7. 24.).

43) Atlantic Council(2024. 7. 23.), "Key takeaways from China's Third Plenum 2024."

44) 人民日报(2024. 3. 29.), 「人民日报整版探讨: 加强涉外法治建设」.

45) 求是网(2024. 4. 2.), 「加快推进涉外法治建设 服务高质量发展和高水平开放」; 新华网(2023. 8. 26.), 「近年来我国律师事务所境外分支机构数量增长迅速」.

문화산업과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공공 문화시설의 90% 이상 무료 개방, 중국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 등의 제작을 통해 자국민의 문화자원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2021년, 무질서한 팬덤 문화를 바로잡고 건전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엔터테인먼트 종합 관리 업무(关于开展文娱领域综合治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하면서 고가의 출연료나 탈세, 트래픽 지상주의를 단속하고 예능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였는데, 이번 3중전회 이후 이러한 관리가 재개될 수 있음.⁴⁷⁾
-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여론 형성과 이념 홍보 확대, 생성형 AI 규제 등 인터넷 콘텐츠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2022년 발표한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을 통해 위법하고 불량한 댓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고, 2024년 6월에는 공공정책 정보를 날조·왜곡해 대중을 오도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조사·처분한 바 있음.⁴⁸⁾
 - 또한 2023년 8월부터 생성형 AI 서비스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및 국가 안전·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최근에는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홍보하는 AI 모델을 선보임.⁴⁹⁾

■ [생태환경] 생태환경의 보호 및 관리 관련 법·제도의 강화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녹색·저탄소 기술 및 산업 발전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 환경규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저가형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 및 품질장벽을 구축하고자 함.⁵⁰⁾
 - 2024년 5월 국무원이 발표한 「2024~25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실행계획」에서는 '신규 건설·개조·확장된 전해 알루미늄 프로젝트가 충족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제시함.
 - 2024년 6월 산업정보기술부가 발표한 「리튬전지산업 표준조건」은 신규 리튬전지 생산능력의 에너지밀도, 전력밀도, 사이클 수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 생산량 증대 프로젝트의 축소 등을 명시함.
- 중국은 녹색·저탄소 기술을 기반으로 과잉생산 방지 및 생산구조 최적화를 촉진하고, 고품질 생산 및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빠르게 도입할 방침임.
 - 탄소배출권거래시장(ETS)을 통해 산업 생산능력을 통제하고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업종을 국가 탄소거래소 적용 업종에 포함할 전망
- 다만 중국의 전반적인 녹색·저탄소 발전 수준은 높지 않으며, 경제·사회의 포괄적인 그린 전환을 위한 내생적 동기가 부족한 상황임.⁵¹⁾

46) 中国新闻网(2024. 7. 25.), 「增强文化自信, 中国将提供更优质文化产品和服务」.

47) 21世纪经济报道(2024. 7. 23.), 「政策明确, 深化文娱领域综合治理」.

48) 经济日报(2024. 7. 16.) 「인터넷 통제 강화하는 중국…시진핑 “보안 장벽 견고히 해야”; 아시아경제(2022. 11. 16.), 「중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SNS 계정도 ‘댓글 관리’ 의무화」.

49) AI타임즈(2024. 5. 24.), 「중국서 ‘시진핑 공식 챗봇’ 등장»; 문화일보(2024. 5. 22.), 「시진핑 정치사상 담은 ‘중국형 챗GPT’ 나왔다»; 央广网(2023. 7. 23.),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全文」.

50) 金融界(2024. 7. 24.), 「中信证券二十届三中全会公报学习体会: 向改革中要发展」, <https://baijiahao.baidu.com/s?id=1805096003043075666&wfr=spider&for=pc>(검색일: 2024. 7. 22.).

51) 中国政府网(2024. 7. 22.), 「健全绿色低碳发展机制」.

- [당의 영도 강화]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 성공을 위해 집중통일영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개혁 업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개혁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공이 당의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보며, 각 개혁이 당 중심으로 결정되고 모든 지역 및 부서에서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임.⁵²⁾
 - 2023년 중국 공산당 내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던 과학 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신하고 과학기술정책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⁵³⁾

4. 평가 및 시사점

-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블록화 및 성장동력 소진 등에 직면한 중국은 발전동력 제고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당(정부)의 경제 관리·통제 강화, 국유 자본·기업의 역할 증대, 새로운 동력 발굴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 중국은 중점 산업·경제 분야에 국유 자본·기업을 지속적으로 집중시키고, 부동산 개발기업 관리에서 국유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는 등 자원배분, 개혁 설계 및 추진 등에 대한 당·정부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전략광물 안보 시스템 및 수출통제제도 개선, 외국의 제재·간섭·확대관할권에 대한 대응 강화 등
 - 자본시장 역시 개방보다는 관리감독 강화, 리스크 방지, 고품질 발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전망이다.
 - 이는 2024년 4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 강령성 문건인 「국9조」⁵⁴⁾와 같은 맥락이며,⁵⁵⁾ 「결정」에 언급된 「금융법」 제정도 관리감독 강화와 금융 리스크 방지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음.⁵⁶⁾
 - 새로운 발전동력으로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모든 지역·산업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정책을 확산 시키면서, 우수한 생산요소가 '새로운 질적 생산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생산요소의 최적화 배치를 추진하고자 함.
 - 기술혁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인재 혁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자본 및 인내자본 등을 집중 투자 하면서, 우수한 토지 역시 국가 중점 프로젝트·산업에 우선 배치되도록 토지관리 제도를 개선
 - 또한 이번 3중전회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의 중점이 될 8대 전략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52) 人民日報(2024. 7. 25.), 「堅持黨中央對進一步全面深化改革的集中統一領導(學習貫徹黨的二十屆三中全會精神)」.

53) 김동수(2023. 5. 16.), 「중국 과학기술 수요와 공급의 시너지」.

54) 「국9조」에서는 '강력한 감독, 리스크 관리, 고품질 발전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업상장 기준, △상장기업 감독 관리, △상장폐지 관리, △금융기관 감독 강화, △자본시장 거래 관리, △중장기 자본 유입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및 개혁개방 확대, △자본시장 고품질 발전 등 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중점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55) 「결정」에서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내용인 '투융자 기능을 강화하고, 강력한 관리감독과 리스크 방지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 추진', '장기자본의 시장 유입 확대', '상장기업 관리감독과 상장폐지 강화', '자본시장의 내재된 안정적 장기기제 수립' 등은 「국9조」의 중요 기조인 '강력한 감독, 리스크 관리, 고품질 발전 제고'와 결을 같이하고 있음. 东方财富網(2024. 7. 23.), 「三中全會深度解读 九大券商聯合发声」.

56) 中国新闻网(2024. 7. 22.), 「(聚焦三中全會) 為何此時提出制定金融法?」.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생물의학, 양자기술)이 처음으로 명시됨에 따라, 해당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 및 사회(민간)의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 한편 부동산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 관련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투입을 통한 단기적 반등을 추구하기보다는 리스크 요인 축소,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어, 중국이 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성장세 회복보다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동산 침체는 중국의 소비와 투자를 모두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주택 과잉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축소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개발투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임대주택(정부가 관리)이 주축으로 포함된 새로운 부동산(주택) 발전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주택 수요는 핵심 주택 수요층 인구의 감소세, 도시화 둔화로 인한 신규 도시유입 인구 감소세, 인구감소 추이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단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대도시 인구 유입 등).
 -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기존의 정책 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확대 등 중앙-지방 간 재정 수입-지출 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근접했다고 평가되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여력의 불균형 확대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할 수 있음.⁵⁷⁾
 - 소비세 징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경우 징수방법(생산지와 소비지 기준)에 따라 지역별 효과가 상이
 -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면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규모는 감소하게 되어 지역별 재정여력 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지방정부의 음성부채 해소 및 재정건정성 확보 등에 불확실성이 남게 됨.
 - 이러한 주요 경제 리스크에 대한 중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은 리스크 발생 원인을 점진적으로 해결하여 해당 리스크가 내수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단 이러한 리스크 관리방식은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임.
 - 이에 따라 중국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부동산 투자,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등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새로운 발전동력으로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기반의 제조업 첨단·스마트·그린화, 생산자 서비스업 발전 및 디지털 경제 융합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이 국가자원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에 집중함에 따라, 첨단·전략·미래 산업에서 미중 간 갈등 및 한중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바, 한국의 경쟁력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이 국가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4대 중점육성기술,⁵⁸⁾ 8대 전략산업,⁵⁹⁾ 7대 공급망 내재화 산업⁶⁰⁾ 등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거나 주도하려는 분야와 상당 부분 중복되어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여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중국이 국가자원을 집중시키려는 산업·기술 분야는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과 중첩되기도 하여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특히 중간재 경쟁력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음.

57) 金融界(2024. 7. 23.), 「全面解读“三中”财税改革」.

58) 핵심공통응용기술, 첨단선도기술, 선진공정기술, 파괴적 혁신기술.

59)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우주항공,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바이오, 양자기술.

60) 집적회로, 산업기계, 의료장비, 계측기기, 기초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첨단재료.

- 또한 한국의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중국 산업 및 기업 동향, 국제협력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3년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첨단로봇·제조, 사이버 보안,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5년간 R&D에 총 2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8월 26일에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8년)'을 발표
 - 또한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자동차, 로봇을 6대 국가첨단산업으로 선정하여,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할 계획
- 중국의 전략 방향에 대응하여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핵심·신기술의 보호, 육성·개발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술·산업·자원의 우위를 보유한 국가가 수출통제 등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소다자 협력, 양자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함.

■ 중국이 지역 맞춤형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번 3중전화에서 강조된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추진은 모든 지역 및 산업·분야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는 혁신 기술·자원·산업·인재 등에 대한 경쟁 과열과 중복투자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화될 수 있음.
 - 중국은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면서 이를 주된 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전까지 경제주체의 집중과 과잉을 허용하다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산업·지역 등이 구분되면 추후 낙후·도태·과잉 분야를 정리해왔음.
 - 전략·미래 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대중국 견제 등에 대응하여 중국이 보유한 공급망 우위품목을 무기화할 수 있음(전략광물 수출통제 등).
- 국가자원을 총동원하여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내 과잉생산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자국 내 경쟁과열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음.
- 특히 이번 「결정」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유통·물류 센터 구축 및 적정지역에 국제물류 허브 건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ODI) 촉진 등을 중장기 무역 개혁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중국 내 과잉생산 품목의 대외수출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내적으로도 과열·과잉 분야의 산업 및 기업 등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경제 및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문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분야가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된다는 점과, 중국기업의 비용·기술 경쟁력 제고에 중국의 국가자원이 총동원된다는 점임.
 - 중국이 국가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신산업·미래산업 관련 품목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신산업·미래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미래산업 발전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
-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국발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 국내 산업 보호조치 실시 및 글로벌 공동대응에의 적극 참여 등을 추진해야 함.

■ 또한 중국의 외국 관련 법제도 및 안보체계 강화, 금융 및 문화 산업에 대한 당·정부의 관리 강화 등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해외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중재센터 및 로펌 설립 등을 확대하면서 외국의 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등 자국 내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2024년 4월 중국은 기존의 「수출입관리조례(進出口關稅條例)」를 대체할 「관세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함.⁶¹⁾
 - 이와 함께 법률 서비스의 경우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초기에는 한국 측이 개방을 요구하는 분야였으나, 현재는 중국 로펌의 경쟁력이 증대된 상황
 - 2023년 세계 50대 로펌에 중국의 대표 로펌인 텐텐스, 킹앤우드맬리슨스, 잉커 3개가 포함되었고,⁶²⁾ 로펌의 성장과 함께 중국 변호사들의 국제 거래나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역량이 향상되어 중국 내 한국 로펌의 입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⁶³⁾
- 또한 외국의 제재, 간섭, 확대관할(long-arm jurisdiction)에 반대하며, 중국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혹은 차별에 엄중히 대응할 전망이다.
-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국 자본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환경 변화가 한중 금융협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 자본시장의 감독·규제 환경의 변화가 주식시장뿐 아니라 창업투자·채권·펀드 시장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영향분석이 필요함.
- 또한 중국의 문화산업 관리 강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2021년 중국의 문화·엔터테인먼트 종합관리업무가 발표된 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BTS, 아이유 등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0여 개를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는 내용을 전파하였다”라며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음.⁶⁴⁾

■ 한편 한중 간 밀접한 경제관계를 고려하여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및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한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함.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양국의 주력 산업 관련 상호 수출입 및 투자 등이 증가하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중간재의 상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공급망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중국이 첨단산업·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집적회로, 산업설비, 의료기기, 첨단재료, 소프트웨어 등으로, 관련 분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61) 「관세법」 제17조에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 혹은 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함. 중국의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에 유사한 내용이 있어 「관세법」 제17조가 매우 새로운 것은 아니나, 중국이 대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맞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됨. 박진희(2024. 5. 20.), 「중국, 신규 관세법에 대중국 관세 부과 행위 맞대응 명시」, KIEP 동향세미나.

62) Law.com(2023. 9. 19.), “The 2023 Global 200 Ranked by Revenue.”

63) 아주경제(2022. 10. 10.), 「중국 내 입지 줄어든 국내 로펌, 동남아 공략 확장」.

64) 또한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중국 팬들로부터 돈을 버는 외국기업들은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 기사를 게재하기도 해, K-팝과 같은 한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음. 경향신문(2021. 9. 6.), 「중국 연예계 단속, 한류도 식히나」.

- 또한 한국과 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 바이오, 의료, 양로, 실버상품·서비스 등 실버경제 발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한중 양국의 디지털·그린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 수요 변화, 중국의 소비 수요 다원화 등과 관련된 신수요를 중심으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KIEP**

부표. 20기 3중전회 「결정」의 주요 내용

중점 업무	주요 내용	
<p>진일보한 전면적 개혁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대 의의 및 총체적 요구</p>	<p>개혁심화의 중요성과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미래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민족부흥 위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 - 복잡한 대내외 상황에 직면, 새로운 과기혁명과 산업변혁에 직면,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견지/개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 추진이 필요 - 신발전이념 관철, 사회의 주요 모순과 변화에 적응, 현대화 건설 성과 확대 및 인민 전체 혜택 등을 위해 필요 - 중대한 위협 도전에 대처, 당/국가 사업의 안정,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촉진, 백년 변혁의 시기 속 전략적 주도권 획득, 당의 새로운위대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개혁의 전면적 심화 필요
	<p>개혁심화의 지도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 사상, 과학발전관 견지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및 신발전이념의 전면적 관철
	<p>개혁심화의 전체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견지/개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 -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전면적 건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개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기본실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실현, 21C 중업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 - 7대 중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 인민의 삶의 질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한 중국 건설, 당의 지도 수준 및 장기집권능력 제고 - 2029년(건국 80주년)까지 이 「결정」에서 제안한 개혁과제 완성
	<p>개혁심화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전면적 지도력 견지, 당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확고히 수호 - 인민 중심, 인민 존중, 인민을 위한 개혁, 개혁 성과 공유 - 혁신 촉진(이론, 실천, 제도, 문화 등 분야), 제도/시스템 개선, 법치주의 견지
<p>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p>	<p>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며 관련 부처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 - 국유경제의 배치 최적화와 구조조정 촉진, 국유기업의 주요 업무 관리 체계 개선, 국유 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확정 - 국유 자본을 국가 안전 분야 및 국민 경제 관련 핵심 분야에 집중 - 국유 기업의 원천 혁신을 위한 제도를 구축 -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국유자본 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 - 국유기업의 평가 제도 개선 및 국유경제 부가가치 회계 실시 - 에너지, 철도, 통신, 수자원, 공공사업 등 산업의 자연 독점 요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쟁적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 - 비공공 부문 경제발전을 위해 민영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영경제 촉진법 제정 - 국가 중대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민영기업 참여 확대 등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 자금 조달, 기업부채 상환 관련 규정 등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 -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 개선 - 민영기업의 지배구조 및 관리제도 개선 지도, 민영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부패 리스크 방지 및 통제 강화 -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제도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지원, 세계 일류 기업 건설 가속화
	<p>전국 통일대시장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하고,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 규제 강화 - 전국 통일 시장과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규정 및 관행을 폐지 - 지역 투자촉진 규정 및 제도 표준화, 위법한 투자우대 조치 금지 - 정부, 공공기관, 국유기업 조달과 같은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공개적으로 관리 - 포괄적인 시장감독 능력을 향상하고, 국가 표준 체계를 개선하며, 지방 표준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

중점 업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요소의 원활한 흐름과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촉진하여 시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 구축, 자본 시장의 규범적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 제도 완비 - 전국 일체화된 기술 및 데이터 시장 육성, 시장 수요와 공급 관계에 따라 요소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완비, 정부의 가격 형성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 - 시장이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지식, 기술, 관리, 데이터 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보상 체계 개선 - 물, 에너지, 교통 등 분야의 가격개혁을 추진하고, 주민의 계단식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제도를 최적화하며, 석유 제품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개선 - 사물 인터넷 발전 가속화, 일체화된 유통 규칙과 표준을 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 - 에너지 관리 체제 개혁 심화, 전국 통합 전력 시장 구축,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 체계 최적화 - 공익적인 장기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구축, 투자 승인 제도개혁 심화, 시장주도의 효과적인 투자 내생 성장 메커니즘 형성 -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 메커니즘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경제의 기초제도 완비(完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지식재산 종합 관리 체계 구축 - 시장 정보 공개 제도 개선, 영업비밀 보호 제도 구축 - 각종 소유제 경제의 재산권과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동일한 책임, 동일한 처벌을 시행하며, 징벌적 배상 제도를 개선 - 재산권 집행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적 및 형사적 수단을 이용한 경제 분쟁 개입을 방지하고 시정 -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분야의 시장 진입 환경을 최적화 - 자본 등록 납입 제도 개혁 심화, 기업 파산체계 개선, 개인 파산 제도 구축, 기업 폐업 관련 개혁 및 기업 퇴출 제도 개선 - 사회 신용 체계와 감독 제도 완비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의 고품질발전 촉진 제도 개선</p>	<p style="text-align: center;">현지여건에 맞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공통기술, 첨단 선도기술, 현대적 공정기술 및 기술 혁신 강화 관련 생산력 발전 - 차세대 정보 기술, 인공지능,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및 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가표준으로 전통산업 고도화 및 기업의 디지털/녹색 전환 지원, 환경보호/안전 등 규제 강화 - 새로운 질적생산력에 적합한 생산 체계 구축 가속화, 다양한 선진 생산요소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촉진, 충요소생산성 제고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 발전 장려 및 표준화, 정부투자펀드 역할 강화 및 인내자본 발전
	<p style="text-align: center;">실물경제과 디지털경제의 심층 통합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고급화/지능화/그린발전 촉진, 다수의 산업 공통기술 플랫폼 구축, 산업모델 및 기업조직형태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위산업의 선도적 지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 산업기금의 운영/감독기제 최적화,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자본투자, 제조업의 합리적 비중을 유지하는 투자 메커니즘 구축, 제조업의 종합비용 및 세금부담의 합리적 축소 - 디지털 산업화 및 산업 디지털화 촉진 위한 정책시스템 개선, 플랫폼 경제의 혁신발전 촉진 및 감독시스템 개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및 감독기능 개선, 효율적이고 편리/안전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메커니즘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업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정책 개선, 산업의 회계 최적화 및 표준화 촉진 - 생산자 서비스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지역 간 행정장벽 제거 - 생활서비스 산업의 다양화 및 중개 서비스기관의 규정/시스템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현대 기반시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인프라 계획 및 표준 시스템 구축, 기존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종합교통시스템 및 철도시스템 개혁, 일반 항공 및 저고도 경제 발전과 유료 도로 정책 최적화 촉진, 해상보험 담보능력 및 글로벌 서비스 수준 제고, 해상 중재제도 혁신 - 주요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추진 및 관리 메커니즘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공급망 유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회로, 산업기계, 의료장비, 기본/산업 소프트웨어, 선진재료 등 핵심산업사슬 발전 시스템

중점 업무	주요 내용	
	및 안전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템 강화, 전체 산업사슬에서 기술연구 및 성과 응용 촉진 - 산업/공급망의 안전 위험 평가 및 대응 메커니즘 구축, 산업의 질서있는 국내이전 협력 메커니즘 개선, 국가 전략 배후지 및 핵심산업 백업 구축 - 국가 비축시스템 개선, 전략적 광물자원의 생산/공급/저장/판매 총괄/연계 시스템 개선
	교육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교육 체계 건설 가속화, 교육 방식·학교 운영 모델·관리 체제·보장 체계 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 - 인성교육 강화, 교사 역량 향상, 교육 평가 개혁 심화 - 중국 특색의 세계 일류 대학과 우수 학과 건설 가속화,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전략적 수요에 따라 학과 개설 및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초 학문, 신흥 학문, 융합 학문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강화 - 대학의 과학기술 혁신 메커니즘 개선, 성과전환 효율성 제고, 과학 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협력 강화 - 직업 교육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학생의 실습 제도 개선 - 사교육의 발전을 표준화 - 높은 수준의 해외 이공계 대학이 중국에서 협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개방 추진 - 공공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 -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 발전 체계 개선, 점진적 무상 교육 범위 확대 방안 모색 - 취학 전 교육과 특수 교육, 전문 교육 체계 개선, 교육의 디지털화 촉진, 평생 교육 강화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메커니즘 구축	과학기술 체제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 체계를 최적화 하고, 핵심기술 공략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역량, 요소 배치·구조화·협력화를 촉진 -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건설 강화. 국가실험실 체계 완비, 국가 연구 기관, 고수준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포지셔닝 최적화,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협력 추진 -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통합구축, 신행 연구개발 기관의 발전 장려, 중국의 대규모 시장을 활용해 혁신 자원 통합과 역량 조직을 강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을 추진 - 과학기술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과학기술 기초 조건의 자주적 보장을 강화 - 국제 과학기술 교류 협력 확대, 중국 내 국제 과학기술 조직 설립을 장려, 대학·연구소·과학기술 협회의 대외 전문 교류 협력 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 - 기초 연구·융합 분야 최첨단 분야 주요 분야의 선도적 연구를 강화 - 과학기술 예산 중 기초 연구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지방, 기업, 사회 조직, 개인의 기초 연구 지원을 장려 - 과학기술 평가 체계 개혁 심화, 과학기술 윤리 관리 강화, 학술 부정 행위를 엄격히 단속 -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 과학기술 선도기업 육성 체계 구축, 기업 주도의 산학연 심층 융합 강화, 기업 연구개발 준비금 제도 도입, 기업이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도록 지원 - 특화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장려, 연구 개발 비용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 -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중소기업에 먼저 사용하게 한 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술 이전을 장려하고 유도 - 중앙 재정 과학기술 자금 배분 및 관리 사용 체계 개선, 재정 과학 연구 과제 예산의 '일괄제' 범위를 확대하여 과학자들에게 더 큰 자율권을 부여 - 과학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국가 기술 이전 체계를 강화하며, 기술 검증 및 중간 실험 시설을 확충 - 과학기술 인력이 성과전환 수익 분배에 대해 더 큰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 성과를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연구성과에 대한 권한 부여를 확대 -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금융 체계 구축, 국가 중대한 과학기술 과제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주요 기술 개발의 위험을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보험 제도를 마련
	인재개발체제 메커니즘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개발 시스템 개혁 심화, 국가 고급인재 허브 건설,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 가속화 - 전략 과학자·일류 과학기술 선도 인재, 우수한 엔지니어, 국가적 장인, 고숙련 인재, 다양한

중점 업무	주요 내용	
		<p>분야의 인재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으로 지역별 인재를 배치하며, 동·중·서부 지역 간 인재 협력을 심화 - 청년 과학기술 인력의 선발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 - 인재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혁신 능력, 품질, 실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인재 평가 체계를 구축 - 대학, 연구 기관, 기업 간 인재 교류 채널을 구축 -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제도 완비, 고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제도 도입 모색
<p>거시경제 거버넌스 구축</p>	<p>국가전략 기획 시스템과 정책 조율 메커니즘 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시스템 개선, 국가 발전계획의 지도적 역할과 국토 공간 기획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 항목 및 지역 계획의 실행 지원 - 전문가가 공공 결정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수립 - 국가발전계획과 중대전략을 통하여 재정·통화·산업·가격·취업 정책 효과 촉진, 자원 분배와 자원 보유 구조를 최적화 - 국가거시자산대차대조표 관리 방안 모색,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을 정책 일관성 평가 범위에 포함 - 기대관리기제(预算管理机) 구축, 고품질발전에 관한 통계지표 시스템 구축, 신(新)경제 분야를 경제통계에 편입 - 생산 단위별 통계인프라 구축, 본점-지점 간의 통계 방법 최적화, 경영활동 지역에 대한 통계를 점진적으로 구축 - 국제 거시정책 조정 메커니즘 수립
	<p>재정·세제 개혁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적인 재정자원 계획과 예산 수립, 행정권·정부신용·국유자원·자산수의 전액을 정부 예산 관리 범위로 편입 - 국유자본운영예산과 실적평가시스템 완비, 국가중대전략 임무와 기본민생 지원 재정여력 확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에 대한 거시지침 강화 - 공공서비스 실적관리와 사전기능평가 강화, 제로베이스 예산수립(零基预算) 개혁 심화 - 예산 배분권 일원화, 예산관리 통일성과 규범성을 제고하며, 예산 공개 및 감독 시스템을 완비하고, 정부종합재무보고제도(权责发生制政府综合财务报告制度)를 개선 - 신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조세제도 연구, 조세법 원칙을 전면 실행, 세계 우대 정책 규범화, 중점 분야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기제 완비 - 직접조세 시스템 완비, 종합소득세와 분야별 개인소득세를 결합, 경영소득·자본소득·재산소득에 대한 조세정책 규범화, 노동소득에 대한 일관된 조세정책 시행 - 세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 개혁 심화 -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여력 향상, 지방 세원 확대, 지방세수 관리 권한을 적정선으로 확대 - 재정이전 지급시스템 완비, 특수목적 재정이전 규범화, 일반 재정이전을 늘리고 시(市)·현(县) 지역의 재정·직권 수준을 통일 - 고품질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이전 인센티브 기제 수립 - 소비세 징수에 대한 지방 분권화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과 세제감면 제도 개선, 공유세수의 배분 비율을 최적화 - 도시 유지건설세·교육부가세·지방교육부가세를 지방부가세로 통합하는 방안 연구, 일부 지방정부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세율을 적용 -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자본금 활용 분야·규모·비율을 적정선으로 확대 - 정부 부채에 대한 전방위 관리 제도를 완비, 지방정부 부채 감독관리 시스템과 음성부채 리스크 예방을 위한 장기기제 수립, 지방용자 플랫폼 개혁 촉진 - 규범화된 비세수 소득관리 추진, 일부 비세수 소득의 지방 분권화 추진, 현지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차별화 관리 - 중앙 직권 범위에 따라 중앙 재정 지출, 지방정부에 위임된 중앙정부 직권 축소 - 불법적 지방정부 자금지출 요구 금지, 지방정부에 직권 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 특수목적 재정이전을 통하여 지급 배정
	<p>금융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금융·녹색금융·포용금융·양로금융·디지털금융 발전, 중점전략·중점분야·취약분야에

중점 업무	주요 내용	
	개혁 심화	<p>대한 고품질 금융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포지셔닝과 거버넌스 정비, 실물경제 지원 인센티브 시스템 수립 - 다양한 자본유자시스템 발전, 채권시장의 다층구조 발전, 직접유자 비중 확대, 국유 금융자본의 관리시스템 최적화 - 상장기업 품질 향상,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상장 폐지제도 강화 - 자본시장의 내재된 안정성 장기기제 강화, 대주주와 실지배주주에 대한 행동 규범 메커니즘 개선, 상장기업의 배당 인센티브 제한 메커니즘을 완비 -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 개선, 지역 자본시장 규정 간의 연계성 증진 및 표준화 추진 - 금융감독시스템 완비, 모든 금융활동을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감독 책임·문책 제도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리감독 협력 수준을 확대 - 안전한 고효율의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시장 등록·위탁(托管)·결산·청산 규정의 일원화 추진,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과 교정 시스템 구축, 시스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금융안정보장 시스템 구축 - 금융 소비자 보호와 불법 금융활동 단속 시스템 구축,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방화벽' 설치 - 높은 수준의 금융개방을 위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 추진, 위안화 역의 시장 발전,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 확대, 상하이를 국제금융허브로 건설 - 네거티브리스트와 내국민대우 관리 방안 개선, 조건을 만족시키는 외자기관의 금융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지원 -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 확대, 적격외국인투자자제도(QFII)를 최적화, 자주적인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구축,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는 강화된 금융안전시스템 구축, 모든 외채에 대한 일원화된 감독시스템 구축,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지역협력발전 전략적 기제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대개발의 신개발구도, 동북지역의 진흥전략, 중부지역 부상, 동부지역 현대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스템 구축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长三角),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의 고품질발전 동력원 역할 강화 - 장강 경제벨트와 황화강 유역의 생태계 보호 및 고품질발전 기제 완비, 승안신구(雄安新区)의 고표준·고품질 건설 추진, 청위(成渝, 청두-충칭) 도시경제권 건설 - 주요 기능구역의 제도 시스템을 완비하고, 국토 공간 최적화 발전에 대한 보장 기제 강화, 지역 통합발전 메커니즘 완비, 새로운 행정 지역 간의 협력 발전 시스템 구축, 동부·중부·서부 지역 간 산업 협력 심화 - 해양경제 발전시스템을 개선
<p>농촌지역 융합발전 시스템 완비</p>	<p>신형도시화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 등록 호적(户口)을 보유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한 이주 농민에게 지역 호적 보유 시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주택보장·자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주 농민의 시민화 추진 - 도시에 정착한 농민에 대한 합법적 토지 권익 보호, 농민의 토지도급권(土地承包权)·농가사용권(宅基地使用权)·집단소득분배권(集体收益分配权) 보호, 자발적인 유상 퇴출 방안 모색 - 도시 규칙 시스템 개선, 대·중·소 도시와 마을(小城镇)의 조화로운 발전과 집약적 분포 구도 조정 - 새로운 초대형 도시에 대한 스마트·고효율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도시 지역에 대한 통합 개발 시스템 수립 - 대형 마을의 인구와 경제규모에 따른 경제사회관리권 부여, 지속가능한 도시 재개발 정책 수립, 지하 종합 파이프라인 건설, 노후 파이프라인을 개조하여 도시 안전과 회복력 향상
	<p>공고한 농촌 기본 운영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토지도급 계약 만료 이후 30년 연장 시범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 도급토지의 소유권·도급권·경영권 분리, 농촌지역에서 규모의 경영 추진 - 도급토지 경영권 양도 가격 책정 메커니즘 개선, 농민 협동 경영 추진 - 신형 농촌 집단경제 발전, 명확한 재산권 구분과 합리적인 분배 시스템 구축, 농민에 대한 충분한 재산권익을 보장
	<p>농업 강화(强农) 농촌혜택 확대(惠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지역의 부(富)농 산업 발전, 다원화된 식품 공급 시스템 구축, 향촌지역의 신산업·신업태를 육성 - 농업 보조금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층구조의 농업 보험 발전

중점 업무	주요 내용	
	부농(富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인구에 대한 빈곤 재발 방지 메커니즘 구축, 농촌 저소득층 인구나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 - 탈빈곤을 위해 투자된, 국가자산의 장기적·효율적 관리 메커니즘 구축, '천만 프로젝트(千万工程)'에 기반한 향촌지역 활성화 장기 메커니즘 구축 - 곡물 등 중요 농산품의 합리적 가격 유지, 곡물 생산지역에 대한 수평적 성(省)급 이익 보상 기제 구축, 주요 생산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 보상 시행 - 곡물 구매·판매·비축관리 시스템 개혁, 곡물과 식품 절약을 위한 장기 메커니즘 개선
	토지제도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경작지에 대한 점용 관리제도 일원화, 경작지 품질 검사 기제 보완 - 고표준의 농지 건설·검수·관리보호 메커니즘 완비, 기초작물 재배에 대한 경작지 활용 관리 체계 개선 - 합법적인 농민 소유주택의 임대·지분소유·합작을 허가, 농촌 집단경영용 건설부지의 시장화 개혁 추진, 토지 부가가치소득의 분배 메커니즘 완비 - 거시정책과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토지 관리시스템 개선, 선도산업과 중점프로젝트의 토지 사용을 우선 보장, 우수 지역에 더 많은 개발 기회 제공 - 새로운 도시 건설용지 지표와 상주 인구 증가치를 고려한 조정 메커니즘 구축 -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국가 경작지와 지역별 보상제도 간의 균형 모색, 도시 지역의 상업용 토지 이용을 최적화, 건설용지의 2차 거래시장 개발, 토지의 혼합 개발사용과 합리적인 용도 전환 촉진, 비활성화 토지 사용 개선 - 각종 산업단지 토지사용 관리 추진, 상업용 토지 사용권의 연장 및 만료 후 갱신 관련 정책 수립
수준 높은 대외개방 메커니즘 구축	제도 개방성 점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환경 표준, 노동 보호, 정부 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분야의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시장 등의 점진적인 자주 개방 추진 - 대외 원조 시스템 및 구조 개혁 심화 - WTO 중심의 다자 무역 시스템 지지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적극 참여 - 높은 수준의 자유 무역 네트워크 확장 - 국제 규정 준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개방 및 협력 환경 최적화
	대외 무역 구조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정책과 재정, 조세, 금융, 산업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 무역 강국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 무역의 디지털화 및 녹색화 적극 대응 - 통관, 세무, 외환 등 규제 혁신을 촉진 - 초국경 전자 상거래 종합 시범구 건설 촉진 - 글로벌 유통 센터 건설 및 유통 시설 활용 최적화 지원 - 무역 리스크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 개선 - 수출 통제 시스템 및 무역 규제 시스템 개선 - 서비스 무역 혁신 및 개선: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목록 마련,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산업 시범지역 추진, △관련 기관의 국제 서비스 역량 제고 지원 - 국경 간 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통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다양화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지향, △법·제도, △국제화에 기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법·제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확대 - 외국인 네거티브 목록 축소: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 조치 전면 폐지,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 개방 확대 추진 - 외국인 투자 촉진 메커니즘 개혁 - 자격 허가, 표준 제정 및 정부 조달 측면에서 외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 보장 - 외자기업의 공급망 참여 지원하여 산업 공급망의 국제 협력 촉진 - 외국인 투자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개선
	지역 개방 및 기능 연계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인 개방 패턴 형성 가속화: △동부 연안지역의 선도적 개방지위 유지,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개방 수준 제고, △육해상 및 내부 연결성 강화, △지역 간 상호 지원 역량 강화

중점 업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교통요지 장점 활용을 통한 개방 지역 간 기능 분업 실현 - 자유 무역 시범 구역의 업그레이드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 '일국양제' 시스템 활용: △홍콩의 국제 금융, 해운 및 무역센터 위상 강화,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인재 유입 지원 및 대외 개방 역량 강화 메커니즘 개선, △광둥,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역의 협력 심화,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과 정책을 개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개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에너지, 조세, 금융, 재해 예방 등 분야에서 다자 간 협력 플랫폼 구축 강화 -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일대일로' 네트워크 구축 -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개선	입법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분야·신분야·외국 관련 입법 개정 강화, 헌법에 부합하는 심사제도 완비 - 지역 간 입법 협력 및 당·국가 법규 연결 강화, 전국 통일적인 법률 정보 플랫폼 구축
	법에 의거한 행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의 직능·권한·절차·책임 법제화 및 정부서비스 표준화·규범화 촉진, 전국 통일적인 온라인 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 법 집행 기준의 지역 간 연계 강화, 행정처벌·형사처벌 양방향 연결 시스템 개선 - 소규모 현(縣) 정부기관·개발구·사업 단위의 행정시스템 개선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公安·검찰·재판·집행기관 간 상호 협력·통제시스템 구축 - 심판권·집행권 분리 개혁 심화, 사법 구제·보호 시스템 개선, 사법 책임제 개선 - 지역 공안기관 개혁, 인권의 사법보장 강화, 불법구금·고문 등 범죄행위 조사·처벌 강화
	법치사회 건설 기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법률서비스 시스템 개선, 변호사·공증·중재·조정 시스템 개혁 심화 - 법치 홍보·교육, 법학 교육 시스템 개선, 미성년자 권익 보호 및 범죄 예방 강화
	외국 관련 법치 건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관련 법률서비스 강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외국 관련 법률 개선, 국제 사법 협력 심화, 외국 관련 민사사건에서 외국법 적용 제도 개선 - 글로벌 비즈니스 중재·조정 제도 개선, 글로벌 일류 중재기구와 로펌 육성 -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
문화 체제·기제 개혁 심화	이데올로기 업무 책임제 개선, 이상적인 신념 교육 정상화·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위원회 이론 학습시스템 개선, 마르크스 이론 연구·건설 프로젝트 혁신, 중국 철학·사회 과학 지식체계 구축 - 대변인 제도 개선, 미디어 생산·방송에 적합한 업무·평가시스템 구축, 주류 미디어 시스템 개혁, 여론 인도·대응시스템 개선 -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 교육·실천 제도 완비, 모범인물 홍보교육 개선, 애국주의 교육 혁신, 영웅 숭상·선열 추모 촉진 - 중화 전통 미덕 계승 시스템 구축, 법률·공공질서 준수 교육, 배금주의·행락주의·극단적 개인주의·역사 허무주의 방지, 인터넷 의식 및 도덕 교육 강화, 불법·유란 출판물 근절 기제 개선
	문화서비스 및 문화제품 공급 기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문화서비스 시스템 개선, 우수 문화자원의 기층 전달 강화, 인민 중심 창작 지향 - 문화·과학기술 융합 교육시스템 모색, 새로운 형태의 문화 업체 발전 - 문화 분야 행정 심사제도 개혁,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종합 관리 개선 - 문화·관광 융합 발전시스템 구축, 문화유산 보호기구 마련, 스포츠 공공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경기 운영시스템 개혁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네트워크 콘텐츠 구축·관리 기능 통합, 뉴스 홍보 및 온라인 여론의 통합 관리 추진 - 생성형 AI 발전 및 관리 시스템 개선 - 사이버공간 관련 법률 강화,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업무체계 개선
	영향력 있는 글로벌 방송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미디어의 국제 방송시스템 혁신, 다양한 외국 대상 방송 제작 - 중국담론과 중국이야기 시스템 구축 강화, 글로벌 방송 영향력 제고 -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실행 메커니즘 건설 - 해외 진출 및 외자 도입 관리 원활화, 국제 인문교류 협력 확대

중점 업무	주요 내용	
민생 보장 제도 개선	소득분배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차 분배 체계 구축, 국민소득분배(国民收入分配)에서 주민소득(居民收入) 비중 제고, 1차 분배에서 노동 임금 비중 제고 - 근로자 임금 결정·인상·지불 보장시스템 개선, 세수·사회보장·이전지불 등 재분배 조정시스템 개선, 공공 자선사업 발전 지원 - 소득 분배 질서 및 부 축적 시스템 규범화, 저소득층 소득 증대·중간소득층 규모 확대·과도한 소득의 합리적 조정시스템 형성, 국유기업 임금 결정시스템 개혁 심화, 각급 책임자의 임금·수당 엄격 관리
	취업 우선 정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취업서비스 체계 개선, 구조적 취업 문제 해결 - 대졸자·농민공·퇴역군인 등의 취업 지원시스템 개선, 평생직업훈련 제도 구축 - 도농 취업 정책시스템 통합, 호적·고용 서비스 일괄 개혁, 창업 촉진 정책 마련, 새로운 형태의 취업 지원 - 노사 협상시스템 개선,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사회보장제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통합적인 양로보험 제도 개선, 전국 통일적인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양로·의료보험 자금 조달·조정 시스템 구축, 양로보험 기초 양로금 제고 - 유연 노동자·농민공·새로운 취업 형태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실업·산재·출산보험 적용범위 확대, 취업한 지역에서 보험 가입 시 호적제한 철폐 - 각 성(省) 내 의료보험 통합,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 강화 - 부녀·아동 권익보장제도 개선, 장애인 사회보장제도 및 돌봄서비스 체계 개선 - 임대·구매 포괄하는 주택제도 구축 강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 보장성주택 건설·공급 확대, 다양한 주택 수요 지원 - 각 시 정부에 부동산시장 조절 자주권 부여, 현지 상황에 맞춘 정책 실시, 관련 도시의 주택 구매제한 정책 폐지·완화 허용, 일반주택·비일반주택 표준 취소 - 부동산 개발 용자 방식과 상품방(매매가능한 부동산) 예약판매 제도 개혁, 부동산 세수제도 개선
	의료보건시스템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체계 구축, 의료·방역 융합 촉진,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유행병 역학 조사·검사 및 테스트·응급처치 등 기능 강화 - 의료·의료보험·의약산업의 통합적 발전 - 우수 의료자원 확대 및 지역 균형 촉진, 기층 의료보건서비스 강화, 공립병원 개혁, 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비 청구 기제 수립, 민영병원 발전 지원 - 혁신 의약·의료기기 발전시스템 구축, 중의약 혁신 발전시스템 개선
	인구 발전 지원·서비스 시스템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인구 발전전략 개선, 전국민·생애 전주기 서비스 구축 - 출산·양육·교육 비용 부담 완화, 출산 휴가 제도 개선, 출산 보조금 제도 수립, 출산·아동 관련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육아서비스체계 건설 강화, 고용기관·지역사회·가정 차원의 다양한 보육 지원 - 인구가동 흐름 파악해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촉진, 인구의 합리적 집적 및 질서 있는 이동 촉진 -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양로사업·양로산업 발전정책 개선, 실버경제 발전, 노인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마련, 자발적·탄력적으로 법정 퇴직 연령 개혁 점진적 추진 - 커뮤니티 양로서비스 기구 육성, 농촌 양로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강화, 기업의 참여 장려, 고독·장애 등 특수 빈곤노인 대상 서비스 개선, 장기 요양보험제도 구축 가속화
생태문명 메커니즘 개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 정밀 관리 실시: △생태 환경 관리 제도 시행, △생태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 토지 공간 이용 관리 및 계획 허가 체계 구축 - 자원의 자산 소유권 제도 및 관리 체계 강화 - 생태 환경 보호, 자원 보호 및 활용, 자원 유지 및 증가 등의 책임 평가 감독 체계 구축 - 국가 생태 안전 작업 메커니즘 강화 - 생태 환경 법전 편찬 	

중점 업무	주요 내용
생태 환경 거버넌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환경 경영 책임 체계, 감독 체계, 시장 체계, 법규 정책 체계 건설 촉진 - 배출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오염원 감독 체계 실시 - 오염물질 협동 관리 및 환경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오염물질 공동 감축 - 환경 정보 법적 공개 체계 개혁 심화 및 환경 신용 감독 체계 구축 - 국가 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 보호지 체계 건설 촉진 - 생태 보호 레드 라인 관리 제도 실시 - 생태 보호 및 복원 투자 메커니즘 구축 - 수자원 요금 개혁 전면적 추진 - 생물 다양성 보호 작업 조정 메커니즘 강화 - 해양 자원 개발 및 보호 시스템 강화 - 천연자원에 대한 유상 사용 제도 개혁 -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추진
녹색·저탄소 발전 메커니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세금, 금융, 투자, 가격 정책 및 표준 체계 실시 - 녹색·저탄소 산업 개발 촉진 및 녹색 소비 장려하는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녹색 저탄소 순환 개발 경제체계 건설 - 녹색 구매 정책 최적화 및 녹색 세금 제도 마련 - 자원 총량 관리 및 절약 체계를 개선하고 폐기물 재활용 체계 강화 -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메커니즘 강화 - 신재생 에너지 수용 및 조절 정책 조치 마련 가속화 - 기후 변화 대응 체계 강화 -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추진: △탄소 배출 통계 체계, △탄소 표시 및 인증 체계, △탄소 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탄소 시장 거래 체계, △온실 가스 자발적 감축 거래 체계 강화
국가 안보 체계 및 역량 현대화 추진	국가 안보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안보 법치·전략·정책·위험 감시 및 경고 체계 완벽하게 개선 - 중요 분야 안전 보호 체계와 중요 특수 조정 지휘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국가 안전 방어 체계 구축 - 국가 안보 기술 강화
	공공 안전 관리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긴급 공공 사건 처리 체계 강화 - 긴급 지휘 메커니즘 개선 - 기초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재해 예방, 감소 및 구조 역량 향상 - 생산 위험 점검 및 처벌 체계 마련 - 식품·의약품 안전 책임 체계 강화 - 생물 안전 감시·경고·예방·제어 체계 강화 - 사이버 안전 체계 구축 강화 - 인공지능 안전 관리·감독 체계 구축
	사회 거버넌스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조직 주도의 자치, 법치, 덕치가 결합된 기초 경영 체계 완성 - 공동 건설, 공동 관리, 공유 사회 경영 체제 개선 - 전국 통일 인구 관리 방안 모색 - 지역사회 거버넌스 개선: △사회복지사 제도 강화, △자원봉사 시스템 발전 촉진 - 공공 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 원스톱 정부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위기 개입 체계 개선을 통한 가족의 관계·전통·역할 강조 - 산업 협회 및 상공회의소 개혁 심화
	대외 국가 안보 메커니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투자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예방 및 통제, 보호 시스템 강화 - 안보 분야에서 국제 법 집행 협력 추진 - 해외에서 중국 국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 - 반제재·반간섭·반 「확대관할법」 관련 메커니즘 개선 - 해양 권익 보호 메커니즘 개선 -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참여 촉진

중점 업무	주요 내용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의 영도 수준 제고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 영도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중앙이 개혁의 전반적 설계·조정·추진 영도 - 당 중앙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메커니즘을 개선해 당 중앙의 명령을 잘 따르게 유도 - 각급 당 위원회가 당 중앙의 결정을 관철하여 담당지역의 부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현지 상황에 맞춘 혁신을 이루고 복제·확산이 가능한 경험 창출 - 사회적 기대, 대중의 지혜, 전문가의 의견, 기층의 경험을 포용해 개혁 설계 - 두드러진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개혁 의제로 삼아 중점 개혁 방안과 기제 마련 - 개혁 장려 및 여론 인도 메커니즘 개선으로 개혁 분위기 조성
	당 건설 제도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주동·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당 건설 기제 개선 - 간부 인사제도 개혁 심화 및 올바른 성과 개념 수립, 간부의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 개발 장려, 간부의 현대화 능력 전면 향상 - 영도 간부의 임기제 개선, 주요 책임자의 변경·인수인계 시스템 개선 - 당 조직의 정치·조직 기능 강화, 당내 법규 개선 및 법규의 권위와 집행력 강화
	청렴한 정치 문화 조성, 반부패 활동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항 규정 이행,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예방제도 개선, 회의 문건 및 전시·포럼 간소화 - 부패가 불가능한 업무시스템 마련, 부정부패 공동조사 시스템 개선, 권력·자금·자원 집중 분야의 부패 시정 심화, 정경유착 조사 강화,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기제 개선, 새로운 유형의 부패 및 숨은 부패 예방·통제 방안 강화 - 당 통치에 대한 감독 책임 강화, 최고 지도자·지도부에 대한 감독 시스템 개선, 특권의식 금지, 감독·심사 기관의 기능 최적화, 기층 감독시스템 개혁 심화, 반부패 입법 추진 및 감찰법 개정, 국경 간 반부패법 제정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중앙의 개혁 결정에 전 당이 진실을 추구하고 실천하며 상호 협력 - 과학적으로 개혁 과제와 이행 일정 및 우선순위 지정, 개혁 시행 주체와 책임 명확화, 실제 효과 및 주민 만족도로 개혁 검증

65) '천만프로젝트(千万工程)'는 2023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1,000개 소강사회 중점 향촌 건설과 1만 개의 향촌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의미함. 搜狐(2023. 6. 4.), 「什么是“千万工程”?」, https://www.sohu.com/a/681946454_121106869(검색일: 2024. 7. 26.).